

화학공장 폭발 · 화재 “시민 화났다”

정부에 재난관리시스템 재정비 촉구 ... “1시간 지나서야 주민들 대피”

잇따른 화학산업단지의 화재사고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허술한 재난관리시스템과 느장대응을 질책하고 나섰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0월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화학기업이 밀집한 전국의 산업단지에 대해 환경안전 정밀진단 및 사고·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전국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의 폭발 및 화재사고를 지켜보며 대형 화약고나 다름없는 화학산업단지에 대해 지역 차원을 떠나 국가 차원의 환경안전 정밀진단과 특단의 재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울산에서 매년 수조원의 세금을 걷어가면서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국비지원을 외면해 왔으며, 국가산업단지는 지역민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조성하여 건설한 대표적인 산물인 만큼 이제 근원적인 책임을 국가가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화학산업단지를 <재난위험시설·지역>으로 지정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충남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신환/남현우)도 10월16일 발생한 현대Oil-Bank 화재와 관련해 “다시는 화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재난관리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라”고 충청남도 와 서산시에 촉구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화재 당시 인근 주민들은 비상연락망이 아닌 TV뉴스를 통해 뒤늦게 화재발생 소식을 접해 현재 가동중인 재난관리시스템에 허점이 있음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1시간 늦은 주민 대피에서도 오히려 유독가스가 번지는 쪽으로 이동시키는 등 중대한 실책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16일 화재사고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 당국은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현대Oil-Bank 역시 사고의 진상을 정확하게 공개한 뒤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0/23>